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3.7.14.(금)	담당자	윤호중의원실 이슬기 선임비서관 (02-784-4961)
------	---------------	-----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민주연구원, 개헌 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헌법 개정’에 국민 10명 중 6명인 62.8% 찬성

-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헌법 전문 반영’ , 67.7% 동의
- ‘임신·출산·양육 관련 국가 지원 권리 신설’에 87.3% 동의
- ‘지방분권국가 규정 조항’에 52.6% 동의
- 응답자 절반 정도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의원, 이하 헌법개정특위)는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지난 4월 진행한 개헌에 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은 개헌 시 쟁점이 될 사안들과 관련해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주)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2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17일과 19~20일 4일간 이뤄졌다.

국민 10명 중 6명 정도인 62.8%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 (매우 16.3%, 어느 정도 46.5%)라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0.7%(매우 5.6%, 어느 정도 15.1%)에 그쳤다.

가장 적절한 헌법 개정 시기를 물었을 때, ‘내년 국회의원 선거 후 다음 국회

에서’ 라는 응답이 31.8%,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이번 국회에서’ 라는 응답이 31.2%, ‘다음번 대통령선거 이후 다음 정부에서’ 응답이 27.3%로 시기별로는 어느 한 시기에 쏠리지 않고 분산됐다.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67.7%(매우 29.4%, 어느 정도 38.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7.5%(전혀 12.9%, 별로 14.6%) 대비 우세했다.

개헌 시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58.3%(매우 22.3%, 어느 정도 36.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8.2%(전혀 16.8%, 별로 21.4%)보다 우세했다.

개헌 시 생명권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72.7%(매우 29.4%, 어느 정도 43.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1.9%(전혀 7.4%, 별로 14.5%)보다 매우 우세했다.

개헌 시 정보기본권 신설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4명 중 3명꼴인 75.6%(매우 31.0%, 어느 정도 44.6%)로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5%(전혀 5.8%, 별로 14.7%)에 그쳤다.

헌법에 모든 국민이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를 신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7.3%(매우 48.0%, 어느 정도 39.3%),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3.1%, 별로 7.2%)는 응답은 10.3%로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 양성평등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명 중 3명 가까이인 74.4%(매우 34.9%, 어느 정도 39.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1.8%(전혀 9.9%, 별로 11.9%) 대비 우세했다.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해서는, 개헌 시 국가형태를 지방분권국가로 규정하는 조항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6%(매우 14.5%, 어느 정도 38.1%)로 반대한다는 응답 39.4%(매우 16.3%, 어느 정도 23.1%) 대비 우세하게 나타났다.

개헌 시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수도조항 신설에 찬성한다는 응답(48.0%: 매우 15.7%, 어느 정도 32.3%)과 반대한다는 응답(44.4%: 매우 17.1%, 어느 정도 27.3%)은 오차범위 내에 대등했다.

개헌 시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 인구비례성 외에도 지역대표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57.8% : 매우 15.7%, 어느 정도 42.1%)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 통일에 대비해 통일헌법에 남북 전체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조항 신설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1.8%로, 반대한다는 응답 42.7%에 비해 우세했다.

국회 및 정부 형태와 관련해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 (37.8%), ‘분권형 대통령제’ (6.0%), ‘의원내각제’ (4.8%) 순으로 조사됐다.

개헌 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인 54.1%(매우 15.7%, 어느 정도 38.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1.5%(전혀 17.3%, 별로 24.2%) 대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5%(매우 25.2%, 어느 정도 36.3%)로 우세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9%(전혀 17.2%, 별로 18.7%)였다.

대통령 출마자의 연령(현행 40세)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2%로 동의한다는 응답 42.5% 대비 우세했다.

개헌 시 감사원 소속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과 국회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변경’ (61.9%), ‘대통령 소속 유지’ (22.4%), ‘국회 소속으로 변경’ (10.1%)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 시 국민발안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명 중 3명 정도인 76.6%(매우 34.2%, 어느 정도 42.4%)로 다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8%(전혀 5.7%, 별로 14.1%)에 그쳤다.

개헌 시 국민소환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4.8%(매우 53.2%, 어느 정도 31.5%)로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2%(전혀 3.9%, 별로 8.3%)에 머물렀다.

개헌 시 국민투표제 도입에 대한 동의 응답도 77.1%(매우 41.5%, 어느 정도 35.6%)로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4%(전혀 5.8%, 별로 12.6%)에 불과했다.

개헌 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동의(46.1% : 매우 13.3% 어느 정도 32.8%)와 비동의(44.4% : 전혀 14.4%, 별로 30.0%)가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는 윤호중 위원장, 김민석·민홍철·정태호 부위원장, 한병도 간사, 강선우·권인숙·김성희·김승원·김영배·박수현·박영미·박진영·소병철·송기현·송옥주·이수진(비례)·이탄희·홍정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는 향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출범 및 개헌 논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조 사 개 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본크기: 1,521명
- 표본오차: $\pm 2.5\%$ 포인트 (95% 신뢰수준)
- 표집방법: 2023년 3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Proportionate Quota and Random Sampling)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무선 90%, 유선 10% RDD)
-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3월 말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비례 가중치 적용(셀가중)
- 응답률: 13.0%
- 조사기간: 2023년 4월 16~17일, 19~20일 (4일간)
- 조사기관: (주)조원씨앤아이